

일본이 문재인 정권의 출범을 바라보는 관점

손제용_릿교대학 정치학과 부교수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국내 정세의 움직임이나 양국 간 외교 관계에 관한 뉴스는 비교적 빈번하게 일본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북정책이나 위안부 합의 등과 같이 한일관계의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나마 정보가 전달된다 하더라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은 피상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일본이 문재인 정권의 출범을 바라보는 관점은 한국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1) 한국 사회를 대립적이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 과거 노무현 정권과 유사하게 “친북”, “반일” 성향을 가진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며, (3) 국민정서가 국가 간 합의나 실정법보다 우위를 점하기 쉬운 한국에게 법치주의에 근거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국론분열”로 치닫고 있는 한국정치?

연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촛불집회에 나와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가운데 도심 다른 한편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접했던 일본인들 중 상당수는 “불안정”과 “혼란”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우려 섞인 시선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봤다. 일본 내에서는 탄핵정국을 “정치지도자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한국 사회”, “당파적인 권력 다툼 속에서 전직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늘 정치적인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한국정치”의 구조적인 문제가 재발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정치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시위가 끊이지 않는 한국사회의 모습은 지극히 모순 가득하고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그려졌다. 이와 같은 비관적 관점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 기존의 정치적 폐단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희망적인 기운이 한국사회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한 시기에서조차도 여전히 일본 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주요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검증 논란 등의 악재 속에서도 이전 정권과는 달리 일반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정권 출범 후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높은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국내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한국내의 높은 기대감이나 지지율에 대한 보도를 접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반대로 정책변화에 대한 국내 보수 정치세력의 반대입장이나 보수성향 언론매체의 정부 비판을 전하면서 “국론분열”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논조로 한국관련 뉴스를 전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언론이 한국을 “국론분열”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일본 언론사들이 주로 한국의 보수성향 매체의 뉴스를 인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언론사별로 정치적 입장이나 국민들로부터

터의 신뢰도에 큰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언론매체를 통해 입수한 정보인지에 따라 정치상황에 대한 인식도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일본의 양대 신문사인 요미우리 신문과 아사히 신문이 2017년 들어 최근까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보도한 기사 중에 언급된 한국 언론사들을 살펴보면, 양쪽 모두 조선일보 혹은 동아일보의 빈도가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도 조선, 중앙, 동아 혹은 KBS 이외의 매체들이 기사 중에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이처럼 국내적으로 한국보수언론의 견해가 과잉 전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본이 한국의 국내여론이나 정치상황을 실제보다 대립적이고 혼란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안 좋은 기억과 “반일”, “친북”의 이미지

최근 일본 국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적 성향을 평가할 때 항상 따라붙은 두 가지 키워드가 바로 “반일”과 “친북”이다.

당선 전에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주장했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반일”로 인식하는 가장 명확하고 직접적인 근거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기간 중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주요 후보들이 모두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이 일본 국내언론에서 그다지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한국 사회를 실제보다 대립적이고 혼란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중융합적인 태도, 즉 “반일”적인 성향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단순화시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정부는 위안부 합의와 같은 한일 간 현안문제 이외에도 국내적으로 다양한 정치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 정권의 정책결정과정상의 불투명성과 소통부재, 권력기관을 통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감시, 정경유착, 청년실업과 빈부격차의 악화 등 수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국내 정치의 자유주의적 개혁과 경제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민적 지지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와 같은 국내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본은 위안부 합의와 같이 자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 이슈가 한국 국내정치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고, 그 결과 상대국(한국) 정부의 태도를 해당 이슈와 관련 지어 단순하게 이해하려고 하기 쉬운 것이다.

또한 많은 일본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화적인 대북정책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균열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도와주는 꼴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북한에 의한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정책적 성향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반일”, “친북”이라고 단순화시켜 인식하게 되는 배경에는 일본이 과거 노무현 정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기억의 영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언급할 때는 항상 “고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곤 한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역사인식 문제를 집요하게 거론하며 국내적으로 반일감정을 부채질한” 장본인이자, 독자적인 외교정책과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추구함으로써 한미일간의 협력관계를 훼손시킨 골치 아픈 외교상대로 기억되고 있다.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정권에서 이루지 못한 뜻을 계승해

서 성취하려고 할 것이며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 역시 “반일”, “친북”적인 성향을 띄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정서가 국가 간 합의나 실정법보다 우월?

한국에서도 국민정서가 헌법이나 실정법 보다 우위를 점하는 상황을 비꼬는 표현으로 “국민 정서법”이란 용어가 종종 사용되곤 하는데 2013년을 전후해서 일본의 몇몇 주요 신문에도 “국민 정서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일관계를 둘러싼 한국정부와 국민의 태도가 법치주의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보다 국민정서에 근거한 감정적인 요소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는 문맥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아베 수상과 갖은 전화회담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그런 국민의 정서와 현실을 인정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새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을 방문한 문희상 특사 역시 회담결과에 대해 밝히는 자리에서 “현재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이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일본 국내에서는 위안부합의의 재협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조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존재했다. 그러나 그보다는 위 발언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현을 언급하면서 한국정부가 또 국제적인 합의보다 감정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비이성적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의견이 더 우세했다.

“국민 정서법”으로 인한 폐단과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정치 엘리트들이 일반 유권자의 여론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응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내 유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외교 교섭에 임하는 정치지도자가 여론을 협상에 활용하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일본)에게 여론의 존재를 알릴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본이 “정서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한국 측의 입장표명을 민주주의적 절차에 근거한 정당한 정책 결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일본 언론이 많은 경우 “정서적”이라는 표현을 “감정적”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상황에 따라 바뀌는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정권교체로 인한 정부의 입장 변화와 국민감정을 강조하는 한국의 태도에 대해서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적으로는 일본이 두 차례의 짧은 중단을 제외하곤 전후 오랜 기간 자민당 장기집권을 유지해왔다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유권자들의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정당차원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자민당은 단기적인 여론 동향의 변화에 반응하며 정권유지에 연연해 할 필요 없이 장기집권을 달성할 수 있었다. 행정부의 수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 의원내각제의 특성상 대통령제에 비해 정치지도자의 국민여론에 대한 민감성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일본에서는 자민당 장기집권이 계속되면서 수상의 교체되더라도 정권 간의 정책적인 연속성이 유지되고 전례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은 TPP와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할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는데, 일본의 경우 정치제도적 특성상, 이와 같은 대통령제 하의 정권교체로 인한 정부입장의 변화에 대해서 그다지 익숙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예상하는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

이상과 같은 관점으로 일본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후의 한국 국내 정치를 바라본다고 할 때, 일본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1) 보수와 진보 양진영 사이의 “국론분열”이 심화되면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대통령의 리더십은 크게 저하될 것이며, (2) “한국 정부가 국민적인 지지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은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거 노무현 정권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역사인식이나 과거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가 “반일”적인 성향을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며, (3) 한국정부가 국민정서에 근거한 “비이성적”인 대일외교정책을 펼쳐나가는 상황에서 전략적 상호이익에 근거한 합리적 문제해결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 크다는 식의 내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일외교정책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교섭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도 과거 보수 정권의 권위주의적인 적폐 청산과 자유주의적인 개혁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유화적인 국론 통합을 꾀함으로써 국내정치적인 지지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경제상황 등 여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되도록 지지기반이 확고한 정권 초기에 한일 간 현안해결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과거 노무현 정권기의 동북아 외교, 한미일 관계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재검토하고 거기에서 얻은 교훈을 살려가면서 노무현 정권과의 차별화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일본과의 외교적인 협상 과정에서 국내 여론의 존재를 일본에 전달하면서 “국민정서” 등의 워딩을 사용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하고, 특정한 정책적 입장을 제시할 때는 “해당 이슈에 대해서 선거과정을 통해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그와 같은 국민적 위임을 받은 정치지도자로서 내린 정책적 결정임을”을 단순 명쾌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日本空間